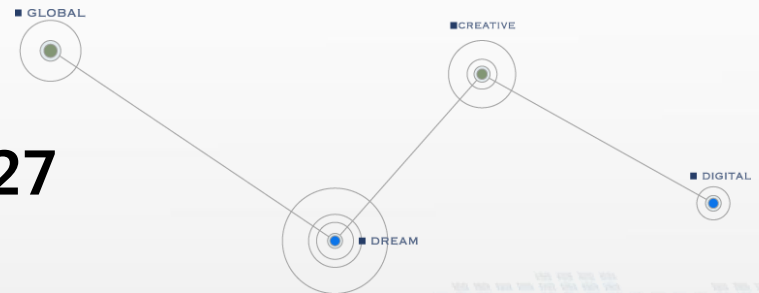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혁신방안

2014. 2. 27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1. 한국경제의 현상진단

'13말~'14초, 한국의 체감 경기 ?

경제지표 온기 도는데

물가상승률·실업률 등 개선돼
경제 긍정적 지표 최고수준인데
국민들 소비 줄이며 자갑 '동풍'
경제지표가 서민고통 반영못해



지표 미스터리



체감경기 여전히 냉골

해 결과를 지수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지표다.
이런 심리지표의 개선은 가시지표의 호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분기 만에 3%대에 올라선 것이다. 또 1월 발표한 10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05억달러로 월 수출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가는 지속적인 안정세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10월 실업률은 2.8%로 9월 2.7%에 이어 2%대를 유지했다.
가시지표와 심리지표의 이런 호조세에도 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을 계산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당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3.2%로 일본(4.1%), 미국(4.9%)에 견줘 안정적이지만 고용률은 지난해 64.2%로 미국(67.1%), 일본(70.6%)에 견줘 낮아지는 모습도 발생한다. 선진국 기준으로 실업률을 집계하면 지난해 실업률이 7.5%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다.

체감할까 역시 공공요금과 거주비 부담을 반영할 경우 물상반기 5.4%에 이르는 한민간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통계로 고려하면 올해 경제고동지수는 4%대에서

새정부 수출 '봄날' 왔는데 체감경기는 '뽕뽕'

내년 1분기 BSI 92... 4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경제활성화 법안 표류·美 양적완화 축소 영향

기업경기심사지수(BSI) 추이
"BSI 지수"의 의미: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환산치(2500계 제로포인트)
장단기(매출액 600대 기업)
99.8

2013년 12월 27일 수요일 09시 09분 산업

경기 좋아져도 젊은이 일자리는 바늘구멍
ILO, 청년실업 우월한 보고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

가계빚 1000조원 돌파... 눈덩이처럼 늘어 9년새 2배

두달간 9배↑... 정부 내달 공식발표
부채 증가속도 빨라 '위험한 뇌관'

으로 한 정부의 공식 집계는 다음 달에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빚 1000조 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로 여망할 수 미치고 경제위기로도 타진된 가계의 연월로 빚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역대

● 별다른 대책도 없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밑
요건을 강조한 뒤부터 이렇듯 가계부채

가계부채 추이
(단위: 원)

중소제조업 경기 春來不似春?

IBK경제연구소 올해 1분기 BSI 조사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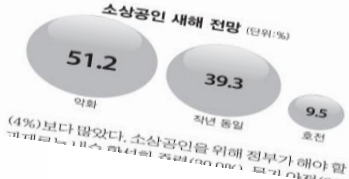
경기전망지수 91로
지난달보다 15P 하락
설비투자계획은 소폭 증가



기(100) 대비 하락한 2013년 4분기 평균제조업 BSI는 93으로 전 분기(99) 대비 상승했다. 또 내수판매지수 BSI 역시 90으로 전 분기(100)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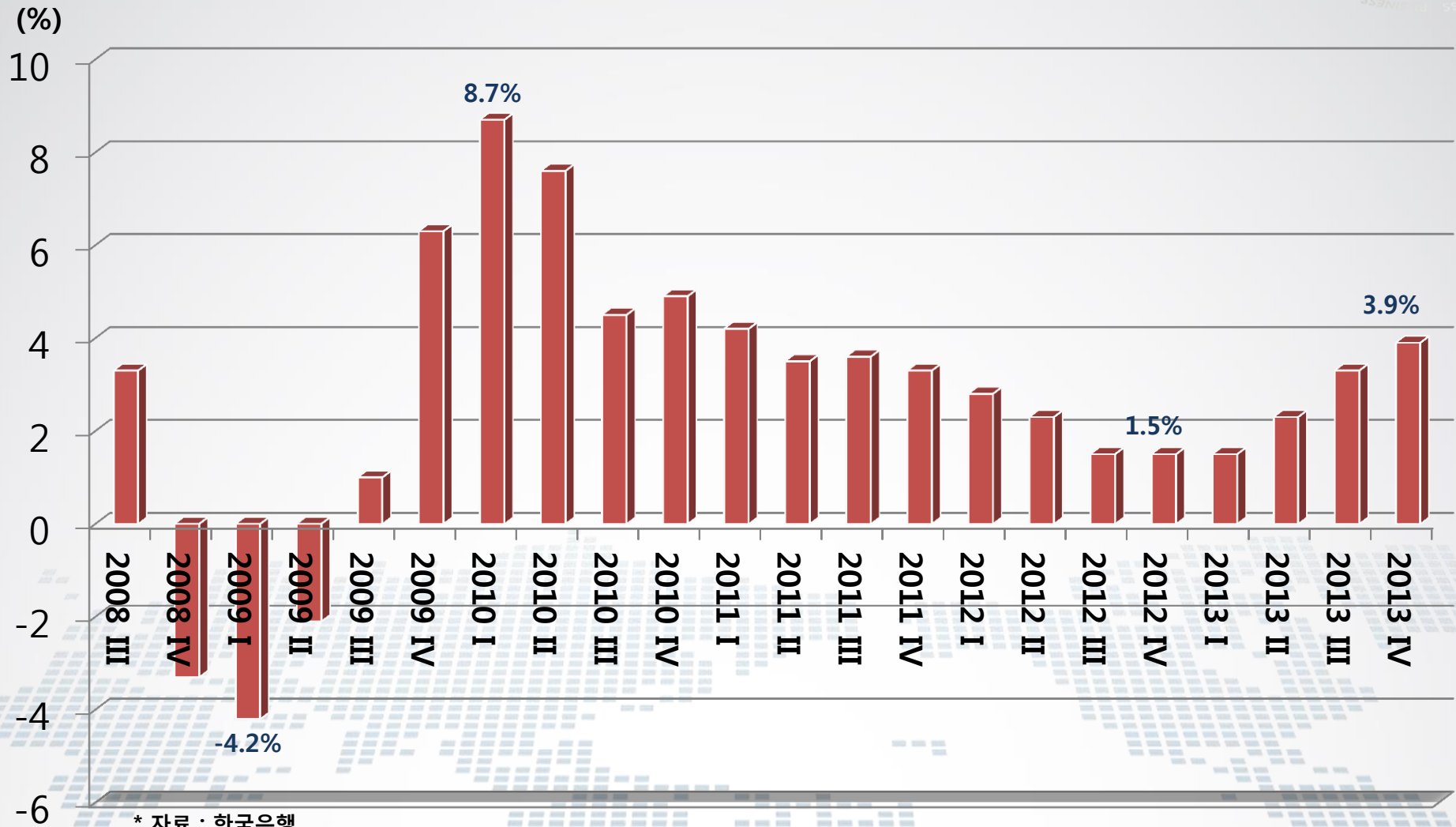
골목상권 "올해도 찬바람만 불 것"

중기중앙회 조사, 소상공인 절반 '악화'
배달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소상공인 경기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올해 경기 개선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수준(39.3%)으로 예상한다는 뒤를 이었으며, 올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내수 위축



(4%)보다 많았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대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40.7%), 대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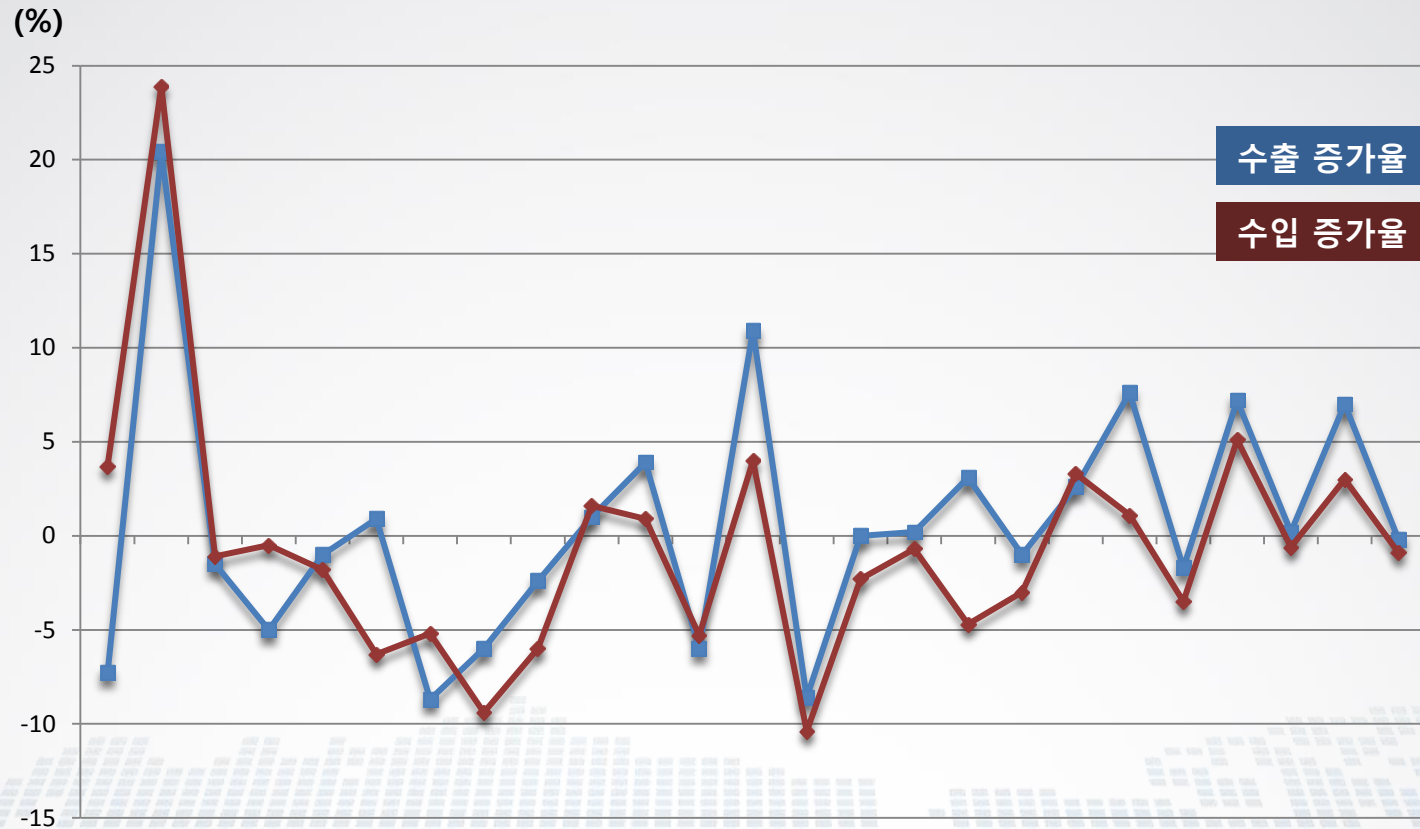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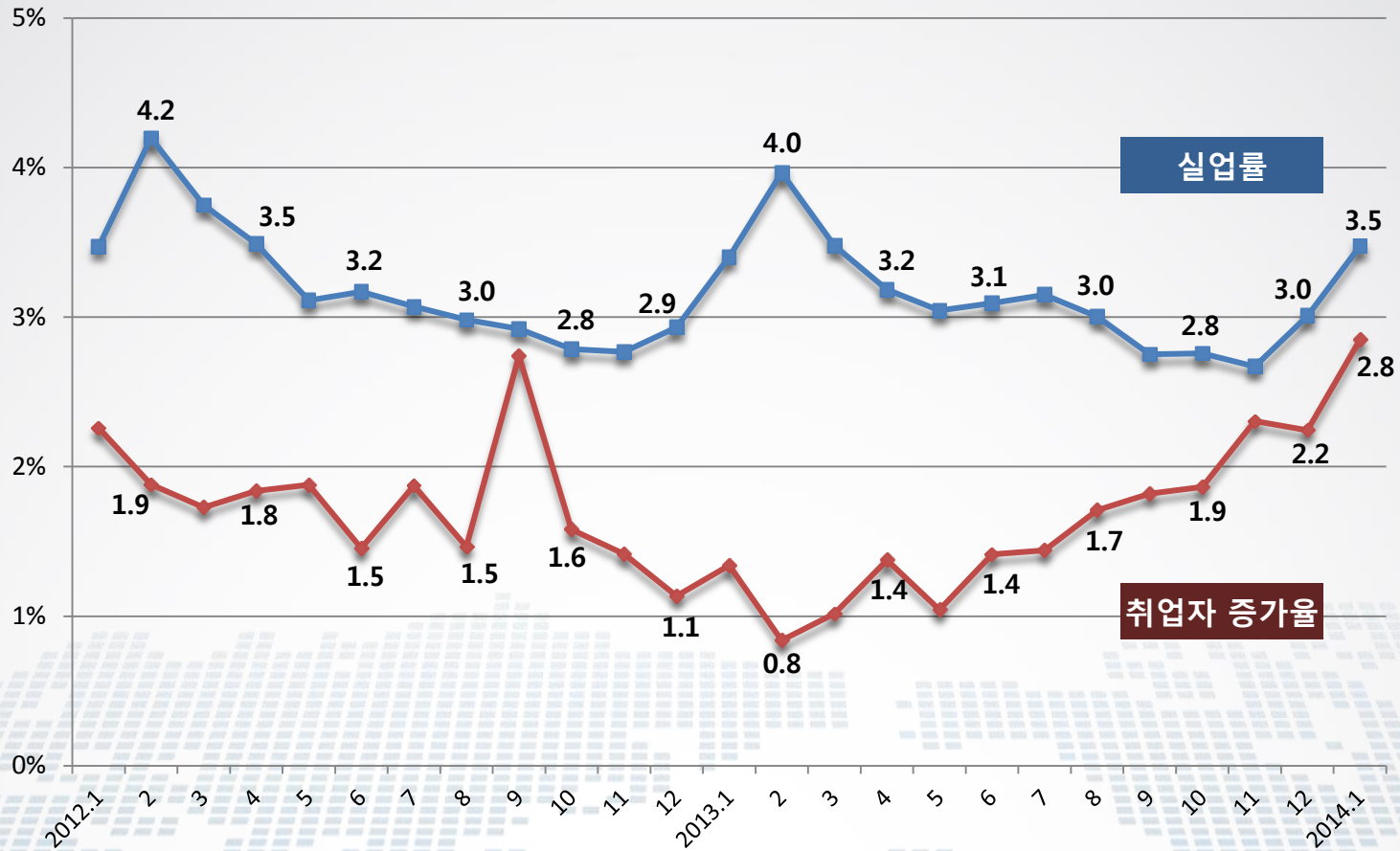
**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수출입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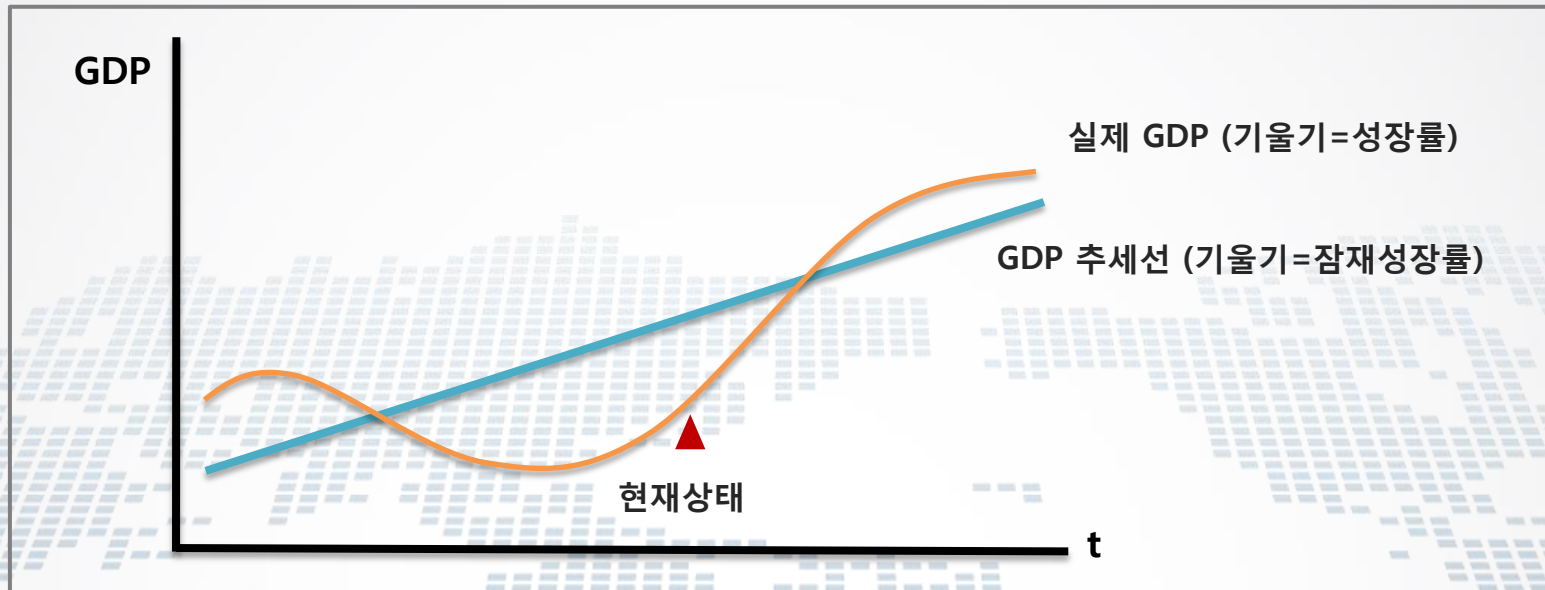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2	3	4	5	6	7	8	9	10	11	12	'14.1
수출 증가율	-7.3	20.4	-1.5	-5.0	-1.0	0.9	-8.7	-6.0	-2.4	1.0	3.9	-6.0	10.9	-8.6	0.0	0.2	3.1	-1.0	2.6	7.6	-1.7	7.2	0.2	7.0	-0.2
수입 증가율	3.7	23.9	-1.1	-0.5	-1.8	-6.3	-5.2	-9.4	-6.0	1.6	0.9	-5.3	4.0	-10.4	-2.3	-0.7	-4.7	-3.0	3.3	1.1	-3.5	5.1	-0.6	3.0	-0.9

취업자증가율과 실업률



[참고] GDP gap과 거시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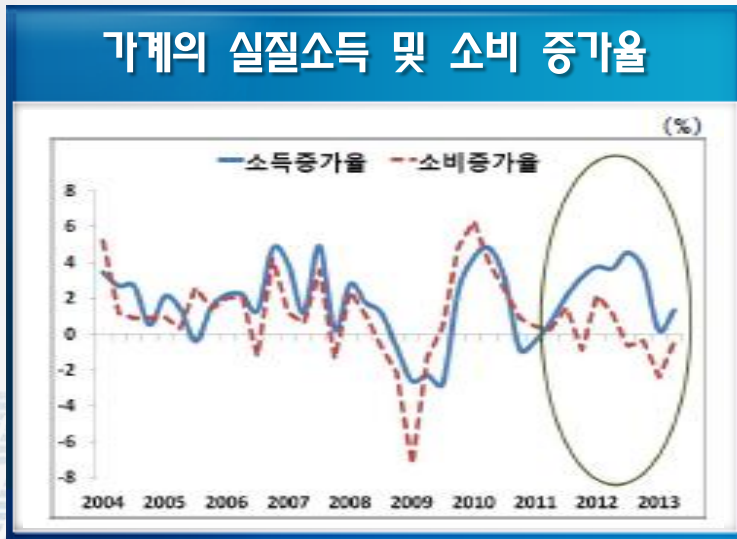
- ◆ 한국의 GDP는 2013 2/4분기 이후 분기성장률 1% 이상 성장 (즉 잠재성장률 상회)
- ◆ 한국은행은 GDP 갭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마이너스라고 분석



소비 부진

- ◆ 가계소비 침체 : 실질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를 줄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 평균소비성향은 크게 하락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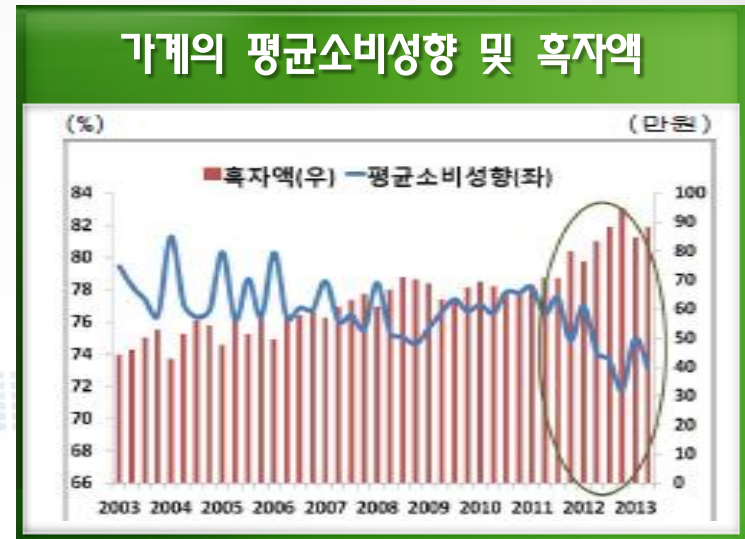
가계의 실질소득 및 소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2013)에서 재인용.

**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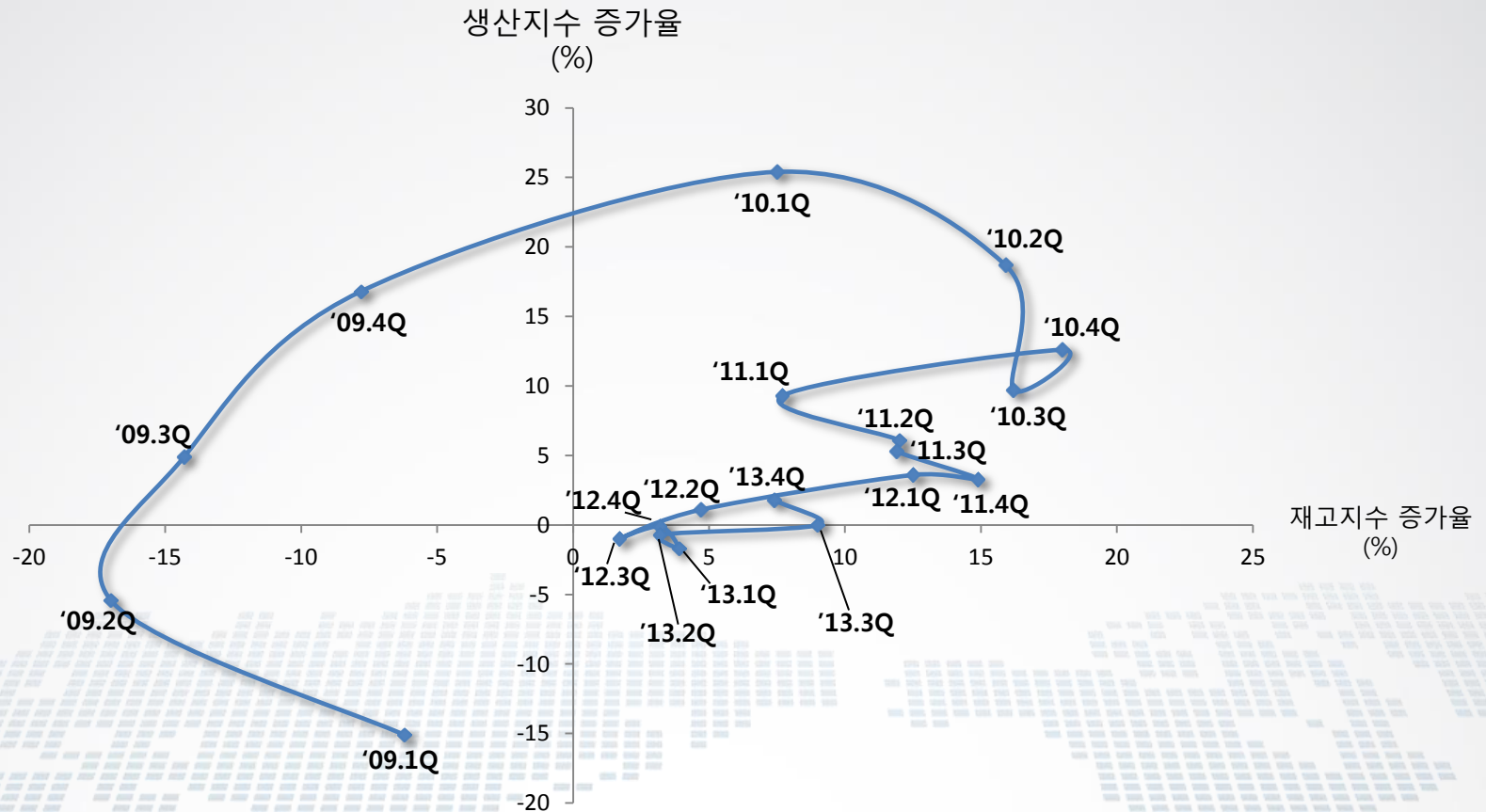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액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2013)에서 재인용.

** $\text{평균소비성향} = (\text{소비지출} / \text{가처분소득}) * 100$

생산재고순환



* 자료 : KDI 경제동향(월별)

IMF 경제전망 (20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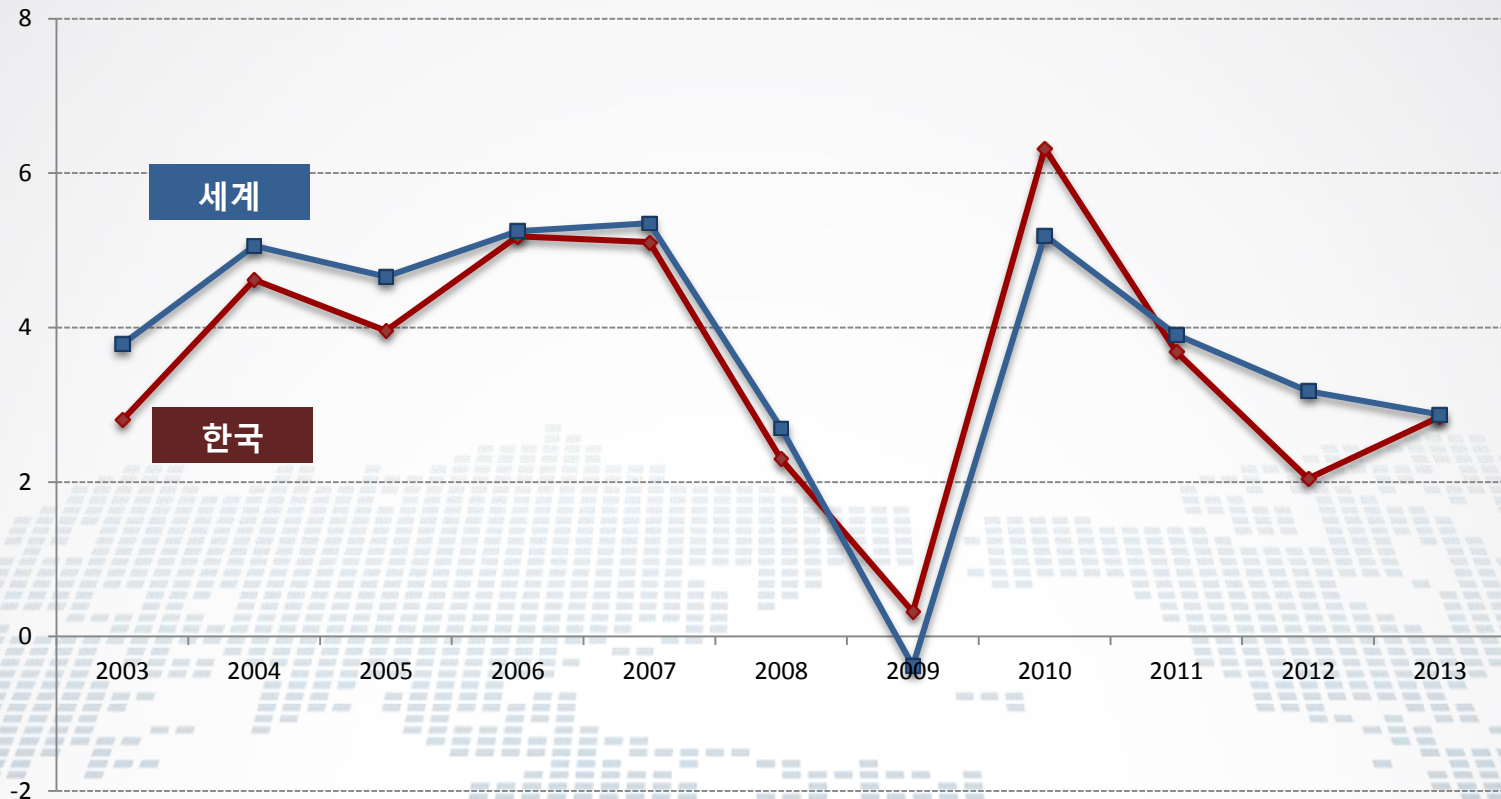
	2013	2014	2015
세계	3.0	3.7	3.9
미국	1.9	2.8	3.0
유로	-0.4	1.0	1.4
일본	1.7	1.7	1.0
중국	7.7	7.5	7.3
인도	4.4	5.4	6.4
한국	2.8	3.7	4.0



2. 글로벌 경제환경과 정책

한국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 ◆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평균성장률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정책과 의미

- ◆ 미국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0.25% 이하의 제로금리정책을 시행
 - 추가로 월 850억불의 국채매입을 통한 통화량 확대(QE: Quantitative Expansion)를 시행
- ◆ 2013년 들어 미국 경기의 회복 조짐이 보이자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완화를 줄여나가는 정책(tapering) 개시
 - 2014년 2월 취임한 Janet Yellen FRB 의장도 양적 완화 계승 방침을 시사
- ◆ 향후 미국의 경기 상황 및 신흥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tapering 이 진행 될 전망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

◆ 양적완화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일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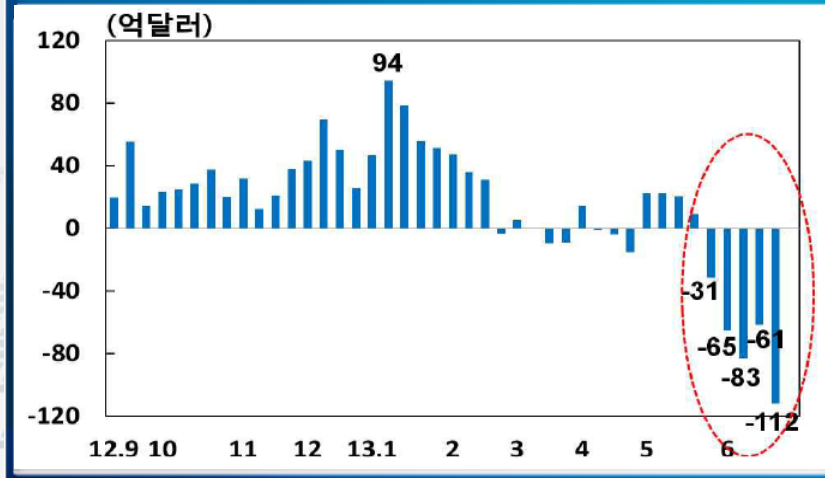
신흥국에게는 그동안 유입된 달러의 유출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초래

- 인도,인도네시아,터키,남아공,브라질은 fragile 5로서 충격, 2014년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도 파동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구조개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적음

- 그러나 신흥국의 충격이 아주 큰 경우 한국도 간접적 영향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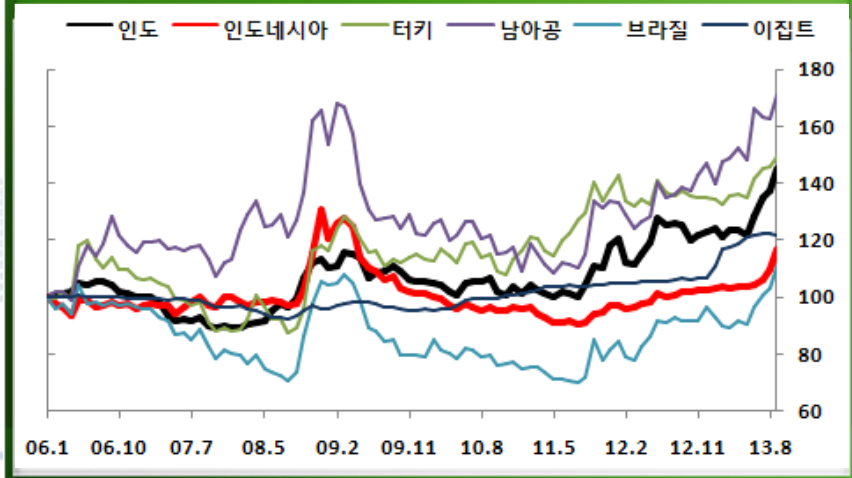
신흥국의 펀드자금



* 자료 : EPFR, 한국은행.

** 전체 신흥국 주식형 및 채권형 기준

신흥국의 환율



* '06.1월말=100 기준



3 . 한국경제의 현안과제

1. 가계부채 대책
2. 부동산 대책
3. 구조조정과
시스템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대책

◆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나 QE 축소 유동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

➡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 검토도 고려

◆ 가계부채가 내수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한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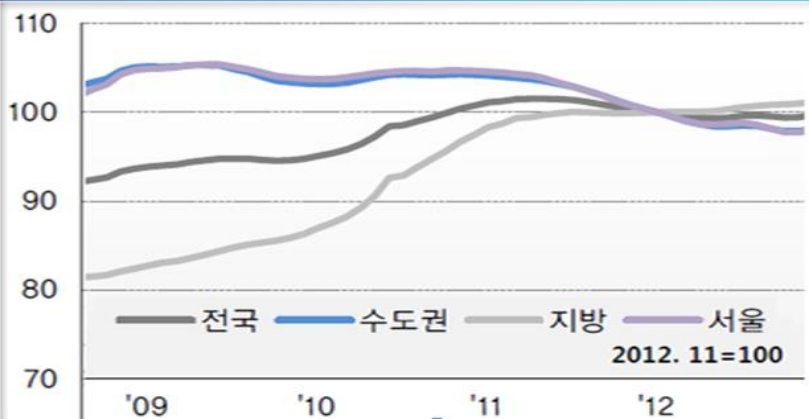
(단위: 조원)	'03말	'05말	'07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가계부채*	472.1	542.9	665.4	776.0	843.2	916.2	963.8	1,021.3

* 가계신용 기준

부동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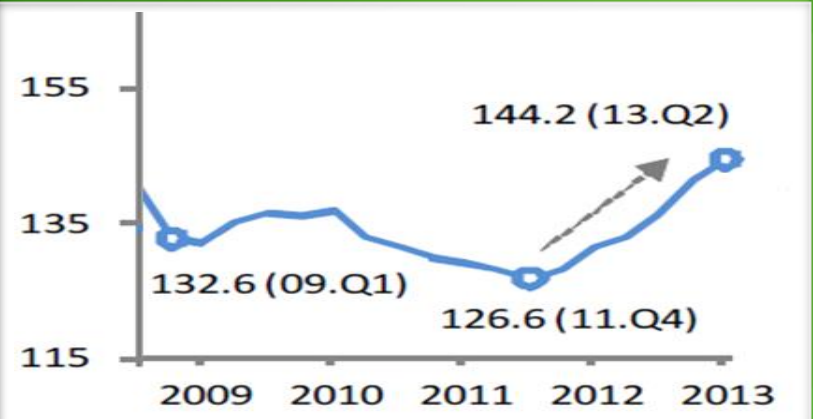
- ◆ 미국은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한국은 부동산 침체로 내수 부진 상태가 지속

한국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감정원

미국 주택가격지수 추이



* 자료 : Datastream,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흐름 지속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등

구조조정과 시스템리스크 관리

◆ 웅진, STX, 동양 등의 사태에서 본 것과 같은 한국 기업 퇴출 구조의 문제점 노출

- 선진국과 같은 시장의 M&A를 통한 정리나 파산제도 등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정부나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이나 강력한 정리제도도 부재

◆ QE 축소 등 외부충격이 일어날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체제 구축 가동할 필요

-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의체 구성도 검토 필요



4 .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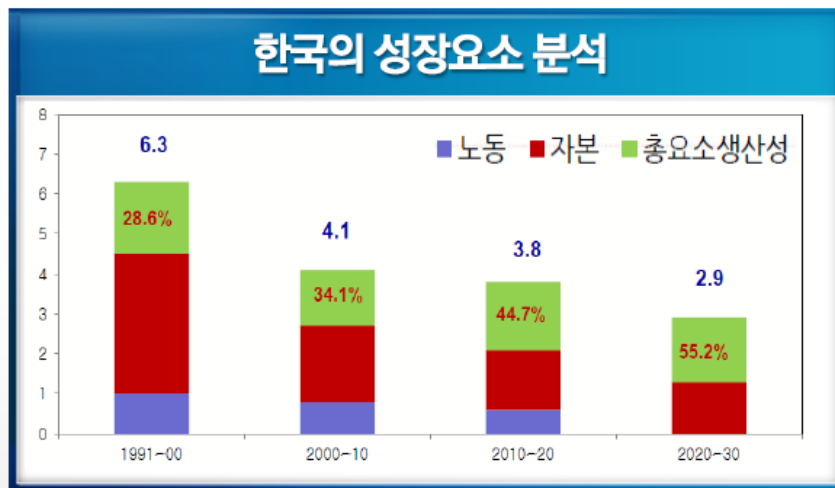
2. 주요 과제

- 창조경제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사회안전망 구축
- 한·중 FTA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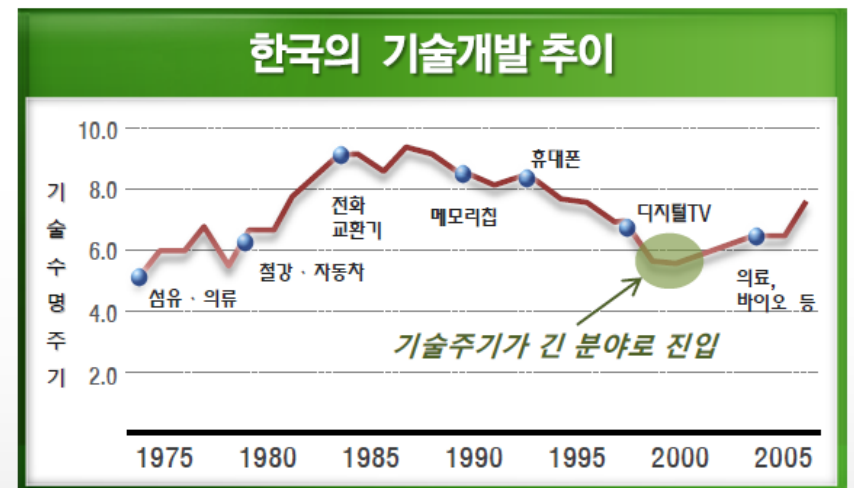
경제혁신의 필요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 생산성 시스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
 - 노동,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주력분야인 전자제품 등은 기술수명이 짧아지면서 **후발주자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 부품소재 등 기술 수명이 긴 분야로의 진입은 아직 미흡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추진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작업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통한 경제전반의 혁신이 필요
 - 시스템에 의한 집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축소



* 자료 :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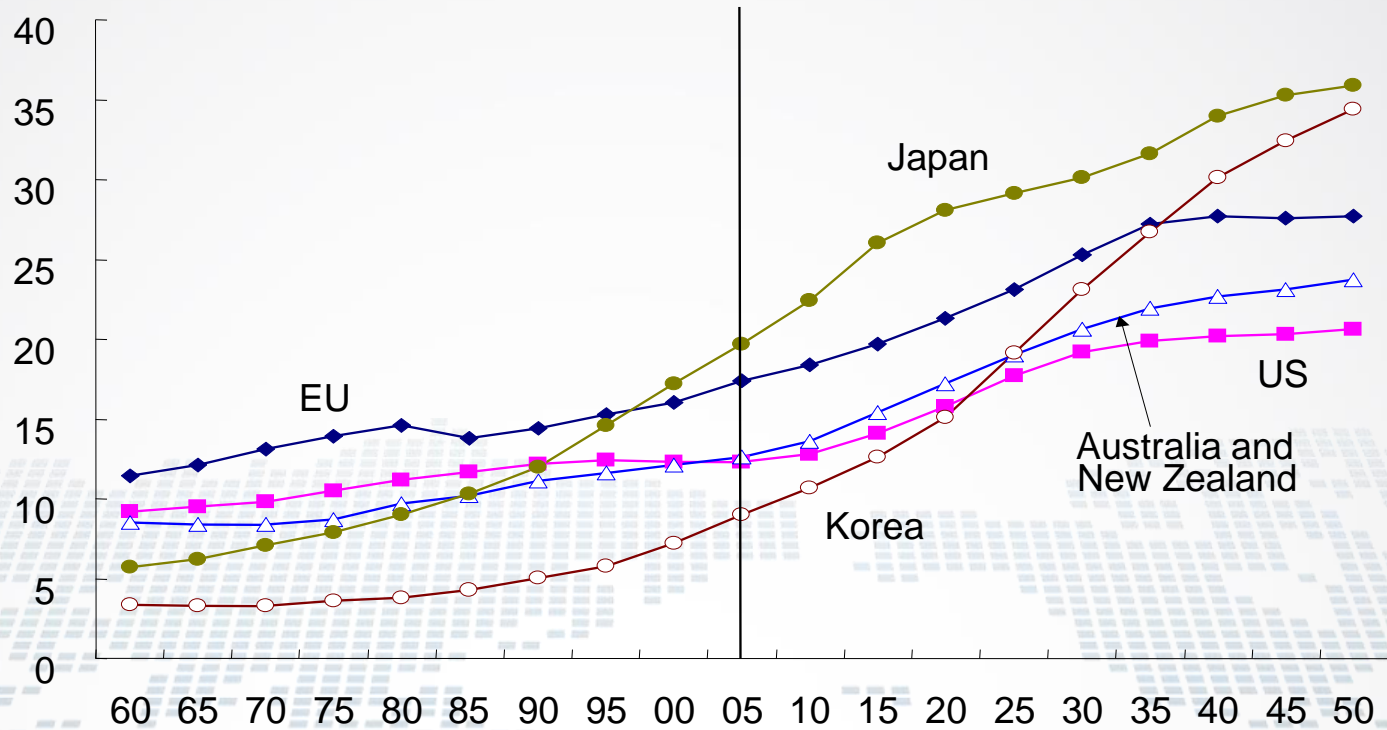
* 자료 : 이근(서울대), 한국경제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동세미나('14.2.13)

인구고령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령인구비율 (65+)

(% of total population)



경제혁신의 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혁신은 경제 전반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특히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

- 대표적 부채과다 공기업 우선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등 공공부문 혁신, 제조업 융합 서비스 금융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 등

◆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 **혁신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 필요

- 대기업 펀드의 M&A 시장 참여 활성화, 모바일 위치기반 마케팅(SoLoMo-Social, Local, Mobile) 환경구축 등

◆ **시스템 혁신**은 이를 움직이는 '**사람**' 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움

-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 대학의 경쟁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도입 등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방법을 혁신

◆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 현금급여 중심 복지에서 고용 창출형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등

목표, 전략 및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벤처·창업 활성화



◆ 창업자 발굴 육성

- 창업 저변 확대 : 초·중·고 비즈쿨 확대
- 창업 사업화 : 우수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청년 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여성 창업자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펀드 조성, 기술은행 도입을 통한 미활용 기술교류 확대 등
- 창업 인프라 : 창업선도대학 확대,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및 지원성과 극대화

◆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 기술유망기업 :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에 R&D, 자금 등 패키지 지원
- 가젤형 기업 :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마케팅, 자금 등 지원
- 한국형 요즈마 펀드 : 해외투자자의 자금을 매칭하여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진출 펀드 신설

◆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 채무조정 지원 등

창조경제 관련 과제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 지역 인재의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술은행 설립

- 국내 대기업·출연연 등이 보유중인 미활용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 풀(pool)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
-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신·기보, VC등과 연계하여 투·융자 자금 추가 지원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 기존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를 5배로 대폭 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 (현황)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약 70% (선진국은 75-80% 차지)

-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 낮음
- 유통 물류 분야도 영세 소상공인과 복합물류 기업의 이중구조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60% 수준 (제조업 95% 이상)

◆ R&D 세액공제 등 세제금융 상 제조업과 같은 제도적 형평성 유지

◆ 서비스 부문의 각종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

- Economic rent 의 문제 : 교육, 의료, 관광 등 진입 장벽 높음
-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 : 이익집단 설득, 국민적 공감대 확보 등

◆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

-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보인 후 확산

◆ 서비스산업의 수출 산업화

-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전망
- 글로벌 분업체제 발달로 서비스도 빠르게 교역재화로 변화 : Non-tradable → trad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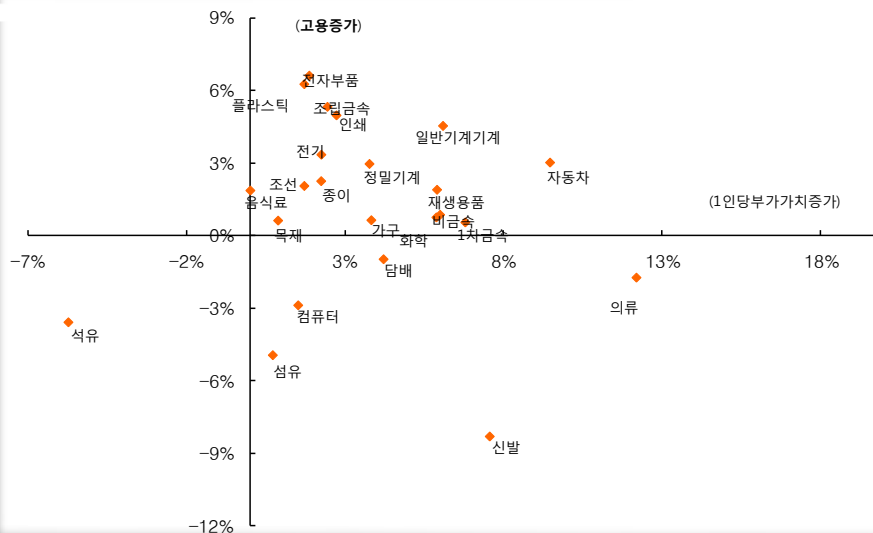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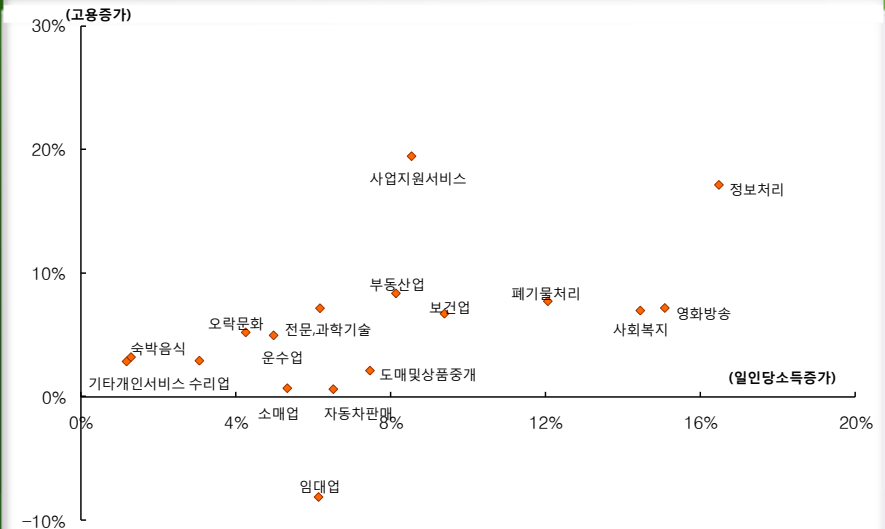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고용 증가율이 높음

- 제조업: 고용 증가율이 낮아져야 생산성이 증가되는 경향
-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서 고용도 확대되는 경향
- 그러나 생산성 및 고용 증가가 높은 성장업종들의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

고용과 생산성 관계 (제조업)



고용과 생산성 관계 (서비스업)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 ◆ 1998년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작업을 기획·조정 : 11,125건 중 5,430건 폐지
 - OECD 보고서의 성공사례, 제프리 존스 “나는 한국이 두렵다”
- ◆ 규제개혁=친 기업정책?
 - 규제란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 (예) 택시 사용연한, 구급차 사용연한
- ◆ 진입규제(entry barrier)는 대부분 기득권을 보호하는 효과
 - 전문자격사제도 업종별 칸막이
- ◆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성화 필요
 -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정치적 수요에 의한 사업추진을 억제케 한 효과
- ◆ 정부의 규제개혁방안
 - 규제총량제 도입, 자동효력상실제 확대

사회 안전망의 기본 방향

사회안전망 구축

◆ 「경제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편,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알선 강화 등

◆ 현금복지는 빈곤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의 보편프로그램은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 저소득층(맞춤형 급여체계),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연금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 등
수혜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복 추진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

- 복지지출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융합형 서비스를 시행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 확대 실시할 필요

[참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구축

◆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 298개 (보사연)

	지방자치 단체	중앙정부 산하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서비스제공기관 (민간)	합계
고용부	1	16	3	1	21
교육부	4	7		8	19
보훈처		2	32	4	38
국세청			1		1
국토부	6	3		3	12
금융위				5	5
농식품부		4		2	6
문체부	3			1	4
방통위	2	3		2	7
복지부	108	12		11	131
산림청			3		3
여가부	7			15	22
중기청				2	2
지경부	2	6		1	9
행안부	14			1	15
환경부	3				3
합계	150	53	39	36	298

한·중 FTA와 TPP 협상

한·중 FTA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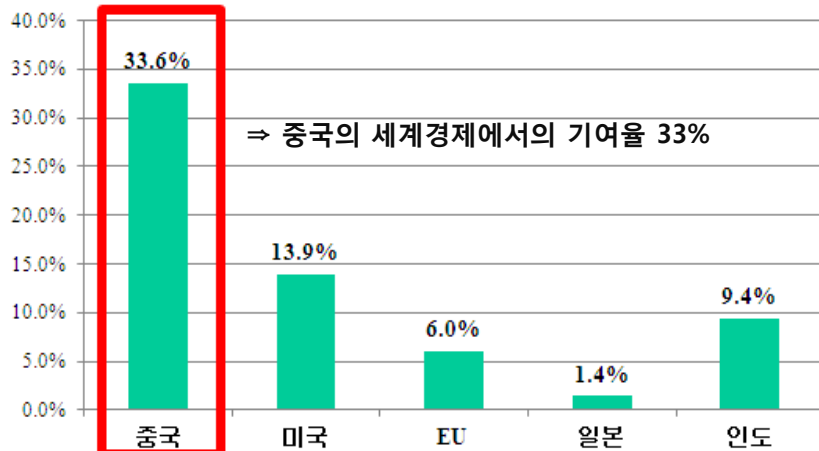
- ◆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확대
- ◆ 한·중 FTA 는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14억 인구의 중국과의 FTA는 R&D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기여
-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의 돌파구 제공
 - 무역, 투자, 생산,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부여하는데 기여
-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확대 모색

한·중 FTA의 의의

한·중 FTA와 개방

-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global production network) 시스템 하에서 중국은 생산에서 소비를 연결하는 chain의 핵심적인 차지
 - “19C는 영국, 20C는 미국, 21C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
(Jim Rogers, 퀀텀 펀드 공동 창시자)
- ◆ 한·중 FTA는 이러한 chain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연결 고리를 든든히 하는 효과

‘12-’ 17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주요국 기여율



한·중 FTA 추진 현황

기간	주요 내용
2004.9~	ASEAN+3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2007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7~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11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2~2013	한-중 FTA 추진관련 실무협의 및 협상

Software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 달성

시장경제 의 창달, 다원적민주주의 확립,
인권 존중 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OECD 헌장 제1조)을 추구

Hardware 주도의 발전 ⇒ Software 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 달성

- 성장잠재력의 확충
- 선진사회 구축

- 투자 증대
- 효율성 제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과 법
제도 정비 및
준수

인적자원의 개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 통합



감사합니다

